

주간 통일정세

2015-15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조평통, '성원종 리스트' 파문 비난(4/17,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7일 서기국 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으로 박근혜 패당이야말로 부정부패의 주범이며 추악한 범죄집단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더욱 날날이 드러났다”고 주장함.
 - 이어 “남조선 각계층은 성원종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파헤치고 부정부패의 원흉, 추악한 범죄집단인 현 보수패당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고 선동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세월호 1주기 맞아 남한 정부 비난(4/13, 조선중앙통신)
 - 조국통일연구원은 13일 ‘세월호 대참사를 빚어낸 괴뢰보수패당은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고발장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북한은 고발장에서 세월호 참사가 ‘고의적인 살인범죄’라고 주장하며 참사 이후 정부의 대응과 더딘 진상조사 상황 등을 비판함.
- 북한 “경찰이 전단살포 탈북자들 설득했다고?”(4/14,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4일 “남한 정부가 대치니 설득이니 요청이니 하는 파렴치한 소리를 하며 마치 빠라 살포를 저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라도 한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함.
 - 이 사이트는 “반정부 투쟁은 전기곤봉, 최루액 대포 등을 동원해 짐승 잡듯 하던 경찰이 탈북자를 설득하고 요청했다는 것은 주객전도의 극치”라며 “언제부터 경찰이 예의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함.

- 북한, '북핵 해결책은 통일' 남한 집권자 발언 비난(4/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핵포기 망상을 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을 “민족적 자존심도 없고 정세판단 능력도 갖추지 못한 미국의 꼭두각시들만이 꿰칠(떠들) 수 있는 녀두리고 궤변”이라며 비판함.
 - 이어 신문은 “남한 집권자는 핵문제를 거들며 위협이니 불안정 요인이니 하는데 그야말로 거꾸로 된 논리”라며 오히려 ‘독수리 훈련’과 ‘맥스선더’ 등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반박함.

- 북한, '헝가리 체제전환 본받으라'는 발언에 발끈(4/15,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5일 '혹독한 대가를 초래할 대결 입방아질'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한 집권자가 존엄높은 우리의 제도를 마구 헐뜯어댔다”며 “동족을 모함하고 시기질투하는 궤변 중의 궤변”이라고 비판함.
 - 더하여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한 것이고,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제도”라며 “목숨바쳐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함.

- 북한, 세월호 1주기 맞아 남한 정부 성토 목소리(4/16,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6일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남한 정부의 진상 규명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난함.
 - 이어 세월호 참사가 현 정부의 무능에서 초래했다며 “현 보수집권 세력에게 세월호 참사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해외 나들이까지 가고 있다”고 비판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북한, '세월호' 거론하며 남한 인권 상황 비난(4/18, 연합뉴스)
 -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18일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남조선 인민들의 초보적인 삶의 권리마저 유린하는 괴뢰보수패당의 반인권적 범죄를 내외에 알리겠다”며 백서를 발표하고 남한 관련 각종 통계 수치와 사건사고 사례 등을 들어 남한 정부를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백서는 “괴뢰패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각계층에 대해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청와대를 향해 시위행진을 벌렸다고 해 무차별적으로 잡아 가두었다”며 삶의 권리를 지키려는 남한 주민들이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함.
 - 백서는 남한의 청년 실업과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를 들어 “남조선은 민생암흑시대”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갑질’ 논란을 지적하며 “남한은 인민들에게는 지옥, 부자들에게는 천당과 같은 썩어빠진 세상”이라고 험담함.

- 대통령의 북핵 및 통일 발언(美 하원대표단 접견시(4.2) ‘북핵문제의 해결책은 한반도 통일’ 관련 ‘미국의 꼭두각시들만이 쥘 수 있는 낫두리이고 궤변’이라고 비난하며 ‘핵포기에 대해 애당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4.14,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평화옹호전민족투」 대변인 담화(4.16), 남한이 ‘사드(THAAD)’ 배치 정당화를 위해 “북핵위협을 떠드는 것은 파렴치한 궤변”으로 남한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세계적인 핵전쟁위험과 새로운 군비경쟁이 고조될 것’이라며 “핵억제력 강화” 역설(4.16, 중앙방송·중앙통신)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90호(4.17), ‘성완중 리스트’ 사건 관련 대통령 실명거론 ‘이번 사건의 주범, 장본인은 남조선의 현 집권자’라며 ‘부정부패의 원흉, 추악한 범죄집단인 보수패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反정부투쟁 선동**(4.17,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미국과 핵전쟁도 불사할 것”(4/16, 연합뉴스)
 - 북한은 미국과 남한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중단되지 않는 한 핵전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강화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국방장관)이 16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현 부장은 “미국은 현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문제를 놓고 남조선을 압박하면서 러시아, 중국 등과의 대결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북조선이 자주적 국방력을 튼튼히 다지지 못했더라면 현재 중동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전쟁의 불도가니 속에 빠졌을 것” 라고 말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분산형조종체계 개발 성공…핵개발 적용 시사(4/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국가과학원 공업정보연구소 과학자들이 2년 남짓한 기간에 우리 식의 분산형조종체계(DCS) ‘미래 102’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크게 소개함.
 - 신문은 현재 세계적으로 DCS가 “원자력공업, 화학공업, 시멘트 공업과 같은 대규모 연속 생산공정에서 자기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국산화의 성공으로 DCS에 대한 “일부 나라의 독점적 지위가 타파됐다”고 강조함.

- 북한 “미국, 냉전식 대북정책 전환해야”(4/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미국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제사회의 규탄 배격을 받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자국 내에서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이어 “오바마 미국 정부의 정책이 조선으로 하여금 로켓 기술을 향상시키고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하도록 했다는 게 미국 정계와 학계의 평”이라며 “오늘날까지 ‘선 핵포기’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 감각이 무딘 것”이라고 비판함.
 - 신문은 “미국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며 “미국은 조선반도의 전략적 환경과 대세의 흐름을 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냉전식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북한-러시아 대법원장 회담...“협력강화 논의”(4/1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북한 박명철 최고재판소 소장과 러시아 바체슬라프 레베데프 최고재판소 소장이 평양에서 회담을 열고 양국 재판소 간 협력을 위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구체적인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회담에는 북한 최근영 최고재판소 제1부소장과 러시아 최고재판소 대표단,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 등도 배석함.

아. 국제기구

- 북한-유엔, 멕시코에 억류된 ‘무두봉호’ 두고 공방(4/18, 연합뉴스)
 - 유엔이 멕시코에 억류된 북한 화물선 ‘무두봉호’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유엔은 무두봉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대상에 오른 회사 소유라 억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지만, 북한은 무두봉호가 다른 회사 소속이라고 반박하며 억류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 유엔대표부 안명훈 차석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멕시코 당국이 강제로 선박을 억류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억류 해제를 촉구했으나 멕시코 측은 억류가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국제적 의무 수행이라고 대응함.
 - 이에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전 미국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발급한 공문서에 무두봉호가 안보리 제재 대상 회사의 소유로 명시돼 있다고 밝힘.

자. 기타 국가

- 북한-유엔, 멕시코에 억류된 ‘무두봉호’ 두고 공방(4/18, 연합뉴스)
 - 유엔이 멕시코에 억류된 북한 화물선 ‘무두봉호’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유엔은 무두봉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대상에 오른 회사 소유라 억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지만, 북한은 무두봉호가 다른 회사 소속이라고 반박하며 억류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 유엔대표부 안명훈 차석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멕시코 당국이 강제로 선박을 억류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억류 해제를 촉구했으나 멕시코 측은 억류가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국제적 의무 수행이라고 대응함.
- 이에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전 미국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발급한 공문서에 무두봉호가 안보리 제재 대상 회사의 소유로 명시돼 있다고 밝힘.

- 日 문화청 홈페이지의 한국 문화재 일부 설명에 ‘임나(任那)’ 표기에 대해 “조선에 대한 식민통치를 정당화하여 재침의 길을 열려는 음흉한 기도”라고 비난(4.13, 중앙통신)
- ‘태양절(4.15, 김일성 생일)’ 관련 주북 무관단, 4월 13일 김정은에게 꽃바구니·축하편지 전달 및 만경대 방문(4.13, 중앙통신)
- 北 「무두봉해운유한책임회사」 사장 중통기자 대답(4.16), 멕시코에 억류(‘14.7.14, 멕시코 특사판해 인근 해역 좌초) 중인自社 선박 ‘무두봉’호는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이 아니다’고 유엔의 ‘제재·억류 대상’ 반박 및 ‘법적 대응 강구 및 안전 귀향’ 피력(4.16, 중앙통신)
- 北, ‘우리는 당당한 핵보유국’이라며 “이것이 조선반도에 새롭게 조성된 전략적환경이며, 국제사회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미국의 ‘선 핵포기 수용 不可 및 對北 정책전환’ 주장(4.16,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리설주 올해 첫 공식활동...김정은과 축구관람(4/1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가 부인 리설주와 함께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맞아 남자축구 경기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전함.
 - 리설주는 지난해 12월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 추모행사에서 김

제1위원장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후 4개월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최룡해·최태복·김양건·곽범기·김평해 노동당 비서와 체육부문 관계자들이 함께 관람함.

- 북한 김정은, ‘경비행기 자체개발’ 공로자와 기념사진(4/1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최근 경비행기 자체 개발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간부들을 초청해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1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이들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불러 사진촬영을 했으며, 김춘섭 국방위원, 리병철 당 제1부부장, 조춘룡 제2경제(군수경제)위원장, 장창하 순으로 배석 간부를 호명함.

- 북한 김정은, 7080 ‘추억의 노래’ 공연 가수에 표창(4/18,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김 제1위원장이 17일 평양 인민극장에서 예술공연 ‘추억의 노래’ 창조와 공연에 참가한 예술인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18일 보도함.
 - 표창장 수여식에 김 제1위원장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고 최태복 당 비서가 수여사를 했으며, 표창장을 받은 예술인 명단에는 주창혁, 최삼숙, 오정운, 전해영, 황숙경, 김광숙 등 북한의 한 시대를 주름잡던 인기 가수들이 포함되었다고 전함.

- 북한 김정은, ‘김정일 원수 칭호일’ 맞아 백두산 올라(4/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18일 새벽 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 행군대원들과 함께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으며 행군단 및 군 간부들이 현지에서 진행한 결의대회를 참관했다고 19일 전함.
 - 이번 일정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김양건 당 비서,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리병철 당 제1부부장이 수행했으며, 현지에서는 럽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오금철 군 부총참모장, 최영호 항공 및 반항공군(공군) 사령관, 손철주 공군중장이 이들을 영접했다고 통신은 전함.
 - 김일성 주석의 동상이 있는 삼지연대기념비 앞에서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김 제1위원장은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신념 계승을 강조하고 “전투비행사들은 항상 ‘우리는 당의 출격명령만 기다린다’는 구호를 들고 전투동원 태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촉구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로두철 북한 부총리, 러시아 방문 마치고 귀국(4/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내각 부총리 로두철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정부 대표단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북-러 친선의 해’ 개막행사에 참가하고 17일 귀국했다”고 보도함.
 - 로 부총리와 궁석웅 외무성 부상 등 대표단 구성원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개막식에 참석해 친선의 해 행사 계획, 문화·학술 협력 계획, 양국 간 국제자동차운송 협정, 양국 중앙은행 간 협력 의정서 등에 서명함.

- 북한 김영남, 반동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로 출발(4/18,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일명 반동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함.
 - 통신은 18일 “김영남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18일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와 반동회의 60주년 및 새로운 아시아-아프리카 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1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밝힘.

다. 공식 행사

- 북한, 최대 명절 태양절 맞아···김정은에 ‘충성 맹세’(4/15,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조선중앙TV)
 - 김정은 黨 제1비서가 15일 0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군 고위 간부들을 대동하고 김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참가자들은 김일성·김정일을 영원히 받들고 김정은 제1비서를 중심으로 단결해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낙원, 천하제일 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맹세를 다졌다”고 덧붙임.
 - 노동신문도 15일 6개면 전체를 생일 행사와 김정은 제1비서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도배했고, 조선중앙TV는 오전 8시부터 특별방송을 하면서 태양절 특집물로 채웠음.

- 북한, 대규모 불꽃놀이로 김일성 생일 기념(4/15,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15일 오후 8시부터 평양 대동강의 반월도와 옥류교, 능라다리 인근에서 열린 ‘태양절 경축 축포 발사’를 생중계했으며 15분간 진행된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는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등 라디오 방송으로도 중계함.
 - 방송은 불꽃놀이 행사 직전 “축포 발사가 진행될 당창건 기념탑 앞 대동강 양안을 중심으로 옥류교와 능라다리 사이 대동강반과 만수대언덕, 모란봉을 비롯한 수도의 곳곳은 축포발사를 관람하기 위해 떨쳐나온 각 계층 평양시민과 청소년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며 들뜬 분위기를 전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특이사항 없음

-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충정을 맹세하는 인민군 육군·해군·항공 및 반항공군·전략군 장병들의 예식, 4월 12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진행(4.13,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15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5,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일성생일(태양절, 4.15) 103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4월 14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4.14,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친필 명판(‘김정숙평양방직공장’) 준공식, 4월 14일 현지에서 진행(4.14,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4월 17일 예술공연 ‘추억의 노래’ 창조와 공연에 참가한 예술인들을 표창(4.17,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4월 17일 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 성원들을 현지에서 만나고 고무·격려(4.19, 중앙통신·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후속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세계식량기구 “북한, 작년 식량배급 국제기준의 63%”(4/16,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유엔은 16일 ‘2015년 북한:인도주의적 필요와 우선 순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공급한 식량배급량은 1인당 하루 평균 383g으로, 세계식량기구(WFP)의 성인 1인당 최소 권장량인 600g의 63.8%에 그쳤다고 밝힘.
 - 보고서는 “북한 주민의 70%인 1천800만 명가량이 식량배급제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는 주민은 전체의 16%에 그쳤다”고 밝힘.

라. 대외 경제관계

- 독일NGO, 북한 청각장애인에 특수시계 제조기술 전수(미국의소리, 4/18)
 - 독일 민간단체가 북한 청각장애인들에게 특수시계 제조 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함.
 - 로버트 그룬드 ‘투게더 함흥’(Together Hamhung) 대표는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독일 전자업체 APE와 함께 북한 청각장애인들이 장애인용 알람 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그룬드 대표는 “APE사가 특수 알람시계 100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부품과 장치를 기부했다”며 “APE사 직원이 5월 1차로 열흘간 북한을 방문해 현지

청각장애인들에게 알람시계 제조 기술을 전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북한 ‘영어 강의’ 확대…“원서 자유자재로 보자”(4/2, 교육신문; 4/19,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최근 입수한 북한 주간지 교육신문(4월2일자)은 “전공학과 교수에 외국어를 적극 인입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기 전공 분야의 원서를 자유자재로 볼 수 있게 준비시키는데 큰 작용을 한다”고 밝힘.
 - 신문은 먼저 “강의 진행 과정에 교재 내용과 관련된 기본 단어들에 중심을 두고

외국어 단어로 표기해주면서 학생들이 전공 단어 습득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자는 것”이라고 외국어 도입 방안을 제시함.

- 신문은 이를 위해 “강의안마다 표기해야 할 전공 영단어를 중점적으로 정해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일부 단어는 주해도 달아주고 구별 방식도 세워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전공 부문 외국어 단어와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잘 예습해오도록 하는 것과 새로 배울 교재의 내용들을 외국어로 엮어보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북한, 독일 지원받아 고려시대 사찰 ‘안화사’ 보수(4/13,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3일 북한이 독일 정부의 도움을 받아 “개성 고려동 송악산 남쪽 기슭에 있는 안화사가 독일의 협조로 보수되고 있다”고 전함.
- 신문은 “건설 당시의 기와나 목재 등 건설재료를 그대로 이용해 옛 부분을 그대로 보존하는 원칙 아래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 북한, 지대 높이 차이 이용한 상수도 설치 확대(4/1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4일 “조선의 지방도시 중 전력소비 없이 물 공급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자연흐름식 상수도 체계를 도입한 곳이 지난 10년간 35개 군에 이르고 있다”고 보도함.

■ 북한 “스포츠 과학화로 체육강국 건설한다”(4/19, 조선중앙통신)

- 1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체육강국 건설에 앞장서고 있는 조직은 '2월17일 과학자·기술자 돌격대'라는 전문가 그룹으로서 이 돌격대는 김일성종합대학,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북한의 명문대학과 연구기관의 과학자와 교원 등으로 이뤄져 있음.
- 이들 전문가는 스포츠 종목별로 체육 기술과 훈련 기법 등을 개발하는 한편 관련 기구를 개발하는 데 연구 역량을 쏟고 있으며, 특히 이 돌격대는 최근 축구, 사격, 다이빙, 활쏘기, 체조, 역기 등 각종 체육 종목의 과학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북한 지난달 미사일 발사, 유엔 심판대에 오른다(4/16,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가 한 차례 연기 됐던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 논의를 오는 20일 재개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전함.
 - 대북제재위 의장국을 맡은 스페인의 유엔주재 대표부 담당자는 “논의가 애초 지난달 30일로 예정됐으나 회의 진행에 필요한 통역자 부족과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사안을 위한 안보리 긴급 소집 등으로 취소됐었다”며 이렇게 밝힘.
 - 대북제재위는 이번 논의에서 전문가 패널에 북한의 지난달 초 단거리 미사일 발사 사건을 의뢰할 예정임. 조사단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결론 내릴 경우 안보리는 회의를 소집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지난달 초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연습인 키리졸브(KR) 연습 시작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가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임.
- 미비확산 특별대표, “北, 진지한 자세로 테이블 나와야”(4/17, 연합뉴스)
 - 애덤 셰인먼 미국 비확산 특별대표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의지를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함.
 - 셰인먼 특별대표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서울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주요국 일부 기자들과 콘퍼런스 콜(전화 회견)을 통해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그는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핵없는 세상’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남아시아나 중동 등에서의 비확산이라는 안보적 차원에서라도 ‘핵없는 세상’이라는 목표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함.

나. 미·북 관계

- 미 대북전문가 고스, “2~5년 안에 김정은 정권 흔들릴수도”(4/14, 연합뉴스)
 -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체제 안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미국 비영리단체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이 주장했다.
 - 북한 권력체제를 주 연구분야로 삼아 온 고스 국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에서 ‘북한 김씨 왕조와 한반도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자기들의 체제를 번영시키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남한의 경제력을 이용하기 위해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할 것”이라며 “(2011년 사망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이런 유혹을 남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고스 국장은 “북한이 만약 단기간 안에 한국에서 북한을 상대해 주지 않으려 한다고 판단한다면 북한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북한이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 같은 중대한 도발을 하지 않는 이유도 한국의 경제력을 이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 미국 국방부, “북한 핵무기 소형화 성공 확신 못해”(4/14,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 수준에 대해 한국과 미국 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함.
 - 헨리에타 레빈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VOA와 전화 통화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이해와 역지력을 높이기 위해 밀접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최근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이 지적한 것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하는 능력을 실험하거나 증명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 레빈 대변인의 이날 인터뷰는 최근 한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성공 가능성을 시사한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의 발언을 일축한 데 대한 답변으로 보임.

- 미국,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 검토(4/16, 연합뉴스)
 -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검토 중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미국 국무부를 인용해 전하였음.
 -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판단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신뢰할 만한 증거가 뒷받침되면 즉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어 의회 일각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꾸준히 요구하는 데 대해 “국무부 장관이 해당 국가가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활동을 지원했다고 판단해야 그 나라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 미국 정부의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한편,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 사건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10월 부시 행정부와의 핵검증 합의에 따라 해제되었음.

- 북한, 핵협상 외종 이란에 미사일부품 수출(4/16,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하반기 미국과 핵협상 중이던 이란에 미사일 부품을 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 미국 보수성향 인터넷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컨’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정보당국 고위관료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함. 이 매체는 “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란으로 미사일 부품을 운송한 사실이 미국 정보당국의 감시망에 걸렸고, 여기에는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에 의해 금지된 부품들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함.
 - 이 매체는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협상이 결렬될 것을 우려해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특히 “북한의 대(對) 이란 미사일 수출 행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일일 정보브리핑 형태로 보고됐으며 유엔 내에서 비밀로 분류돼 있다”고 밝혔음.

- 북한 ICBM,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 낮아(4/16, 연합뉴스)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이 낮다고 유력 군사전문 잡지가 분석하였음.
 - 최근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의 북한 ICBM 배치 및 핵탄두 소형화 발언

등으로 북한 장거리미사일 개발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분석이어서 주목됨.

- 군사컨설팅업체 IHS 제인스 산하 잡지 'IHS 제인스 인텔리전스 위클리'는 “북한이 대포동·화성 등 미국 서해안을 목표로 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능력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미사일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분석하며 그 근거로 “북한 미사일은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에 취약할 뿐 아니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음.

■ 북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미국과 핵전쟁도 불사할 것(4/16, 연합뉴스)

- 북한은 미국과 남한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중단되지 않는 한 핵전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강화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 (국방장관)이 밝힘.
- 현 부장은 이날 모스크바 시내 래디슨 로얄 호텔에서 열린 제4차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위협을 계속하며 한국과 침략적 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 현 부장은 “미국은 현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문제를 놓고 남조선에 압박하면서 러시아, 중국 등과의 대결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북조선이 자주적 국방력을 튼튼히 다지지 못했더라면 현재 중동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전쟁의 불도가니 속에 빠졌을 것”이라고 말하며 또한, “북한은 평화를 원하지만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도발과 침략전쟁을 강요하는 길로 나오면 공화국 군대는 도발에는 즉각적인 대응 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상용 무력에 의한 전쟁이든 핵전쟁이든 미국이 원하고 택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과 작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핵전쟁 불사입장을 밝힘.

■ 미 하원 외교위원장, 김정은 정권,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정권(4/17, 연합뉴스)

-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을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정권’이라고 규탄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자행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음.

-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 의회 레이번 빌딩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고 로이스 위원장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힘.
- 로이스 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과거 반 총장과 만났을 때 내가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촉구했고 그 이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구성돼 곧바로 북한의 끔찍한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날 수 있었다”면서 “오늘 만남에서도 내가 반 총장에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외부에 노출시키고 문제 삼아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음.

다. 중·북 관계

- 중국, 제2차대전 승리기념 열병식에 김정은 초청(4/15, 연합뉴스)
 - 중국이 오는 9월 제2차대전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초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김정은 제1위원장이 2011년 말 집권 이후 중국으로부터 공식방문 초청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임. 김 제1위원장이 중국 측의 초청을 수용한다면 집권 후 첫 방중이 오는 9월께 이루어질 예정임.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김정은 제1위원장을 초청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 “그렇다(是的)” 라고 밝히면서 “올해는 세계 반(反)파시즘 전쟁 승리 및 중국인민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으로 중국 측은 기념행사를 거행할 것이며 우리는 이미 관련국 지도자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말했음. 또한, 현재 중국이 각국과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 북한, 중국-러시아 '전승절 러브콜'(4/15, 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의 잇단 러브콜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몸값'이 높아지는 모양새로 나타남.
 - 중국과 러시아 모두 제2차 대전에서 일본과 독일을 각각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전승 70주년 행사에 김 제1위원장을 공식 초청했으며, 김 제1위원장이 중국과 러시아 행사 모두 참석할지 아니면 어느 한쪽만 참석할지 또 모두 불참할 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임.

- 중국 정부는 지난 14일 제2차 대전 승리 7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열리는 열병식에 김정은 제1위원장을 초청했다고 공식 밝혔지만, 아직 북한이 중국의 초청장을 공식 접수했는지와 참석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동해진출 추진 중국 북한항구 적극 개발·이용하겠다(4/15, 연합뉴스)
 - ‘동해출구’ 확보에 공을 들여온 중국이 ‘차항출해(借港出海·항구를 빌려 바다로 진출) 실현’을 강조하며 다시 한 번 북한, 러시아 항구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 의지를 내보임.
 - 또 중국 동북지역을 주축으로 한 북한-중국-러시아-몽골 등 4개국 간의 경제 협력도 한층 강화하고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동해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북극해 항로 개척도 추진키로 했음.
 - 중국 지린(吉林)성은 최근 발표한 ‘지린성동부녹색전환발전구역총계획’에서 “러시아와의 자루비노항 건설 협력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북한 항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이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신문화보(新文化報)가 15일 보도했음. 또 이번 발표에서 철도, 도로, 공항 인프라 건설 등을 통해 동북지역의 국제적 협력을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음.
- 시진핑 주석, 반둥회의 참석…북한 김영남과 첫 접촉 가능성(4/17,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의 최고위급 지도자가 조만간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접촉할 것으로 예상됨.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9~24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아프리카(AA) 정상회의(일명 반둥회의)에 참석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힘.
 - 시 주석은 지난 2013년 5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베이징을 찾은 최룡해 당시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만난 적이 있지만, 김 제1위원장이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위원장을 만난 적은 없음. 이 회의에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두 인물이 이곳에서 첫 만남을 갖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라. 일·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러·북 관계

- 북한 부총리·인민무력부장 방러 위해 출국(4/13,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로두철 부총리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각각 단장을 맡은 정부 대표단과 인민군 대표단이 모두 러시아 방문차 출국했다고 보도했음.
 - 로 부총리는 ‘러시아-북한 친선의 해’ 개막행사에, 현 인민무력부장은 제4차 국제안보회의 참석하기로 함. 로 부총리가 참석하는 행사는 지난달 러시아와 북한이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과 한반도 광복 70주년인 올해를 친선의 해로 선포하면서 마련되었음.
 - 북한 고위 인사들의 잇따른 모스크바 방문은 행사 참석 이외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다음 달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 참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의제 조율 등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 2차 ‘나진-하산 프로젝트’ 시범운송 北 동의 늦어져(4/14, 연합뉴스)
 - 러시아산 유연탄을 북한 나진항을 거쳐 경북 포항항으로 들여오는 2차 나산-하산 프로젝트 시범운송에 대한 북한의 동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번에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통해 들여오는 러시아산 유연탄은 14만~15만 규모로 작년 12월 1차 나산-하산 프로젝트 시범운송(4만500t)의 3배 규모로 전해짐.
 - 당초 2차 시범운송은 지난겨울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물량 확보가 여의치 않은 등의 이유로 미뤄졌고 현재는 북측의 최종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운송이 늦어지고 있음. 정부는 이달 13일 북측이 이번 시범운송에 최종 동의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북측의 답변이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러-북, 두만강 국경에 자동차 전용 다리 건설 추진(4/15, 연합뉴스)
 - 러시아와 북한이 양국 국경인 두만강에 자동차 전용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러시아 교통부는 14일(현지시간) 언론 보도문을 통해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북한 양국 친선의 해 개막식에서 북한 교통부(육해운성)와 자동차 운송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며, 협정 체결로 이전에 없었던 러-북 양국 간 자동차 운송 분야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양국 간 교역과 관광 확대를 위한 조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하였음.
 - 러시아와 북한 교통 당국은 두만강에 자동차 전용 다리가 건설될 경우 양국 교역 상품 이동과 관광객 교류가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바. 기타

- 북한, 유엔의 무두봉호 억류 반박...법적 대응할 것(4/16, 연합뉴스)
 - 북한은 멕시코에 억류된 선박 '무두봉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이라는 유엔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함.
 - 조선중앙통신은 무두봉호는 유엔 제재 대상 회사의 소유가 아닌 만큼 유엔은 무두봉호의 안전한 귀항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무두봉해운유한책임회사 사장과 인터뷰 기사를 소개하였음.
 - 이 사장은 먼저 "무두봉호는 2008년 10월 개인들의 출자금으로 설립된 사회협동 단체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무두봉해운유한책임 회사의 합법적인 소유라고 주장하며, 북한 육해운성의 영업허가(허가증 번호 13-203)와 북한 국가해사감독국의 선박등록증(회사식별번호 5435991)을 증거로 제시함. 또 유엔의 제재 대상인 원양해운관리유한책임회사는 무역선 관리업을 하는 회사로, 무두봉호를 소유한 무두봉해운유한책임회사와 별개의 독자적인 법인이라고 설명하였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미국, 파이로프로세싱 첫 단계 '전해환원' 한국에 허용할 것(4/14, 연합뉴스)
 - 미국이 한국에 대해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하지 않되 양국이 공동연구 중인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의 첫 단계인 '전해환원'을 허용해줄 것이라고 미국 싱크 탱크 연구원들이 전망했음.
 -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 진행상황에 밝은 카네기평화연구원의 김두연 연구원과 마크 힙스 연구원은 이날 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이 연구개발 차원에서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함. 파이로 프로세싱은 전해환원까지의 앞부분과 전해정련 이후의 뒷부분으로 나뉘며 앞부분에서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민감한 핵물질이 분리되지 않음.
 - 김 연구원과 힙스 연구원은 "새 협정에는 한국에 농축이나 재처리를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그러나 미래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한·미 양국은 현재 공동연구가 진행 중인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기술적 타당성과 산업적 배치 전망, 비확산 영향에 대한 공통의 이해에 도달한 뒤 미래에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함.

- 사상 첫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미국 '두마리 토끼 잡기'(4/15, 연합뉴스)
 -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가 한·일 관계의 흐름을 바꿀 변곡점으로 작용할지 주목됨.
 - 이 회의는 양국에 관계 개선을 독려하는 '촉진자(facilitator)'에서 화해를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중재자(mediator)'로 미국의 역할이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임. 무엇보다도 3국의 외교차관끼리 모이는 형태의 회의체는 사상 처음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은 말함.
 - 특히 이번 회동은 미국외교의 실세인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음. 그러나 이후 일본은 과거사와 독도문제를 놓고 다시 도발을 이어나갔고 이에 한국이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관계는 더욱 경색되었고, 여기에 과거사와 관련한 미국 일부 고위관료들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미국의 '일본 편들기'까지 일면서 관계 개선 해법은 더욱 어려워진 듯한 양상임.

-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日에 과거사 치유·화해 노력 독려(4/15, 연합뉴스)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한일 간 과거사 갈등에 대해 “미국은 일본 정부에 대해 치유·화해를 도모하는 발언이나 노력이 이뤄지도록 독려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리퍼트 대사는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로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미국은 과거사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난제라는 것을 잘 인식해왔고, 치유와 화해를 하는 방향으로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함.
 - 리퍼트 대사는 이날 ‘한미동맹 현 상황 평가 및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미국이 (한일간에) 공식적 중재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한일 모두 훌륭한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면서 “미래 협력가능성 진전에 대해 많은 협력이 3국(한미일)간에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하였음.

- 미 국무부 장관, 한일관계, 긍정적 궤도 올라(4/15, 연합뉴스)
 -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 간 관계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음.
 - 블링큰 장관은 워싱턴DC 국무부 본부에서 ‘미일관계 70주년’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거론하며 이같이 밝힘.
 - 블링큰 장관은 한·미·일 3국 간 협력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중요할지에 대한 질의에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대표적으로 언급하며 “한일 두나라 사이의 매우 생산적인 만남이었다”고 치하했으며, 이번 회의가 “5년여 만에 처음” 열린 점도 지목했음. 그러나 한일 간의 긴장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함.

- 주한미군사령관, 사드 한반도 배치, 북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4/16, 연합뉴스)
 -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힘.
 -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미국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사드는 높은 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증언함.

- 이어 “우리는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는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패트리엇 체계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지난해 6월 3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 조찬 강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드 전개에 대해 요청한 바 있다”면서 “언론에선 현재 사전조사 연구가 이뤄진다는 식으로 묘사했지만, 그 정도라기보다는 한국에 사드를 전개하기 위한 초기 검토가 이뤄지는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조태용 외교차관, 방미…역사문제 단호히 얘기할 것(4/16, 연합뉴스)

-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일본의 역사 문제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 조 차관은 이날 오전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통해 일본이 올바른 역사관에 입각해 행동할 수 있도록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일본과의 안보 협력 문제에 대해 조 차관은 국익 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구상을 보이며 “우리가 일본과 협력해서 국익을 증대할 수 있는 북핵 문제라든지 경제 협력 그리고 교류 같은 부분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고 설명 함. 그러나 “역사 문제에서는 단호하게, 그리고 다른 협력 분야에서는 국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한일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부연했음.

■ 한미, ‘북한 핵탄재 미사일’ 방어능력 키운다(4/16,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어능력을 강화해나기로 함.
- 한·미 양국은 14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15일 전함.
- 양국은 이를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각각 대응해온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해 만든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공식으로 출범시키기로 합의함. 이는 북한이

최근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이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능력을 갈수록 고도화함에 따라 지금까지 핵과 미사일로 이원화돼 있던 대응 체계를 일원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국이 TPP 참여 공식 문의…미국 지금은 안돼(4/16, 연합뉴스)
 -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공식 문의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함.
 - 그러나 미국은 당장 현 단계에서 한국을 추가로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함. WP에 따르면 문제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포함한 한국의 통상 관료들이 이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대행과 캐롤라인 앳킨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을 만나 TPP 문제를 논의했음.
 - TPP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협상 중인 미국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현재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익명을 요구한 한국 통상 당국의 소식통은 이번 면담에 대해 ‘환영받지 못한 분위기’라고 전했다고 WP는 밝힘.

- 미국 태평양사령관, 한반도에 사드포대 배치 논의중(4/17, 연합뉴스)
 -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미사일 포대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는 증언이 나옴.
 -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우리는 꿈이 아닌 한반도에 사드 포대를 잠정적으로 추가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역내에서 동맹인 일본, 한국과 협력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생산적”이라고 평가함. 미군에서 한반도를 특정해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나. 한·중 관계

- 중국서 한국전쟁 65주년 대형드라마 '38선' 제작(4/14, 연합뉴스)
 - 중국에서 한국전쟁(6·25전쟁) 65주년인 올해 '38선(三八線)'이라는 제목의 대형 드라마가 제작될 예정임.
 - 드라마는 1950년 압록강변의 어민들이 미군 전투기 폭격을 당한 뒤 동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미국에 원한을 갖고자 북한으로 건너가 참전하는 내용을 그릴 예정이며, 젊은이들은 사투를 겪으면서 과감한 애국전사로 거듭나 결국 상감령(上甘嶺)전투에서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소개하였음.
 - 이 드라마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부각시켜 애국주의를 고취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과 이미 수교한 한국과 미국에 총부리를 겨눴다는 점이 두드러지지 않을 수 없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주도 AIB, 한국 등 57개 창립회원국 확정(4/15, 연합뉴스)
 -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57개 창립회원국을 확정하여, 이로써 현재까지 AIIB 창립회원국이 57개로 증가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함.
 - 창립회원국은 지분을 배정 등 AIIB 운영규정을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게 되며, 마감 시한인 3월 31일 이후 가입을 신청한 국가들은 일반회원국으로 발언권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창립회원국에는 주요 20개국(G20) 중 13개국이, 주요 7개국(G7)에서는 미국, 일본, 캐나다를 제외한 4개국이 있음.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 캄보디아, 네팔,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몰디브,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였고,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조지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포함돼 있음.

- 중국, 9월 승전기념 열병식에 남북한 정상 모두 초청(4/17,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오는 9월 제2차대전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남북 정상을 모두 초청하였음.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열병식에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초청됐느냐’는 질문에 “이미 모든 관련국 지도자들에게 참가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답변함.
- 이 답변은 중국이 남북 정상을 모두 오는 9월 3일께 거행하는 세계 반(反)과시즘 전쟁 및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을 비롯한 기념행사에 초청했음을 확인해 준 것으로 해석됨. 그러나 실제로 남북 정상의 9월 베이징 방문이 성사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임.

다. 한·일 관계

- 아베 총리, 야스쿠니 봄 제사때 참배 안해(4/13,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靖國)신사 봄 제사(춘계 예대제)가 열리는 21~23일 야스쿠니를 참배하지 않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교도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아베 총리가 봄 제사 기간 참배를 보류한다는 의향을 굳혔다고 전하며, 직접 참배하지 않는 대신, 공물을 바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하였음.
 - 아베 총리는 취임 1주년이었던 지난 2013년 12월26일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해 한국, 중국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도 삐걱대게 만들. 이후 아베 총리는 작년 야스쿠니 봄, 가을 제사와 8·15 등 주요 계기에 야스쿠니 참배를 하지 않고 공물을 봉납함. 더욱이 이번에는 야스쿠니 봄 제사 직후 미국 방문(26일)이 예정돼 있는 만큼 직접 참배는 자제하는 쪽으로 일찌감치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임.
- 윤병세 외교부 장관, 對日외교, 결코 조용한 외교 아니다(4/14,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과거사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용한 외교’ 기조가 효과적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결코 조용한 외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일본 문제는 한일 관계를 넘어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 사항으로서 지난 2년간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같이 밝힘.

- 또한, 윤 장관은 “역사에 대해 단호하게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미국에 물량외교를 펴고 있지만 미국 내 양심 세력을 설득하는 데 크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 일본인 57% “전쟁피해국에 사죄·보상 충분했다”(4/14, 연합뉴스)
 - 일본인은 과거 전쟁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국가들에 충분한 사죄와 보상을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음.
 - 전후 70주년을 맞아 아사히신문이 3~4월 전국 성인 남녀 3천명(유효응답자 2천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전쟁 등으로 피해를 준 국가와 국민에게 사죄와 보상을 충분히 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57%로 집계돼 ‘아직 충분치 않다’는 응답자(24%) 비율을 웃돌았음. 그러나 과거 전쟁에 대해 ‘학교에서 제대로 배웠다’고 답한 일본인은 13%에 그침.
 - 아울러 ‘정치인은 피해를 준 국가들에 앞으로도 사죄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응답이 46%, ‘그럴 필요없다’는 응답이 42%로 서로 큰 차이가 없었음. 또 전쟁 등 피해를 준 주변국가와 ‘잘 지내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46%에 머물러, 그렇지 않다는 답(50%)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국회, 日 독도영유권침탈 역사왜곡 규탄결의안 채택(4/14, 연합뉴스)
 - 국회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왜곡 교과서 검정 승인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음.
 - 나흘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재석 182명 가운데 찬성 18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
 - 결의안은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역사를 날조하는 연속적인 도발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며 또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앞에서는 미래지향적 우호증진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적극적으로 역사를 왜곡·날조하고 영토를 침탈하는 이중적 태도에 강한 유감이다. 왜곡·날조된 교과서 문제는 지금 세대뿐 아니라 한일 양국 간 미래세대 갈등과 분쟁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힘.

-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오늘 서울서 개최(4/14, 연합뉴스)**
 - 한일 양국의 외교·국방당국이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5년여만에 열림.
 -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양국 외교·국방 라인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 ‘2+2’ 형식으로, 우리 측에서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수석대표를 맡게 됨. 차석 대표로는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과 스즈키 아쓰오(鈴木敦夫)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안보정책 및 협력 현황, 지역정세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며, 특히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해 이달 말 개정이 이뤄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과 관련, 일본 측의 설명과 우리 측의 입장 전달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눈치보는 아베 총리,···‘사죄’ 뺀 연설로 전후70주년 담화 여론탐색(4/17,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달 중 있을 두 번의 해외 연설 기회에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그가 여름에 발표할 전후 70주년 담화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 아베 총리는 22일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반둥회의(아시아-아프리카 회의) 60주년 기념 정상회의 연설에서 2차대전에 대한 반성을 표명하되, 사죄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니혼게이지아신문이 17일 보도했음.
 - 신문은 아베 총리가 “두 연설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에 입각해 8월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일명 아베 담화) 내용을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결국,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가 빠진 두 차례 연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상정 범위 이내’일 경우 아베 담화에서도 사죄를 뺄 것으로 판단됨.

- **한·미·일,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시 한국주권 존중”(4/18, 연합뉴스)**
 - 한·미·일 3국은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비롯해 방위안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확인함. 3국은 16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이들 국가의 국방부 차관보급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3자 안보토의(DTT)’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 3국은 토의직후 공동으로 발표한 언론 보도문에서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개정될 것”이라며 “이 같은 노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며 제3국 주권의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힘. 3국이 언급한 ‘제3국’은 미·일 방위지침 개정이 주권과 국익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한국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3국의 이 같은 합의내용은 ‘일본이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나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리커창 총리, “미·중 ‘무계추’는 경제…제3국시장 공동개발해야”(4/14, 연합뉴스)
 -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가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동, 경제·무역이 양국 관계의 ‘무계추(중심추)’라고 규정하면서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음.
 - 리 총리는 지난 1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특사 격으로 방중한 프리츠커 장관이 이끄는 미국 무역 대표단 일행과 만나 “양국 경제는 상호보완성이 크며 기초시설, 에너지, 정보기술,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면서 구체적으로 “미국의 기술과 경험, 중국의 경쟁력 있는 장비, 산업을 결합해 공동으로 제3국 시장을 개척해 나감으로써 양국 무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자”고 제안했음.
 - 한편, 프리츠커 장관은 자신의 방중이 미국이 대통령 무역대표단을 처음으로 중국에 파견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면서 미중간 제3국 시장 공동개발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간 투자협정 협상에 조속한 결실이 이뤄지길 희망했음.

- 미 상무장관, 中 성장 둔화, 모두에게 나쁜 것(4/16, 연합뉴스)
 -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의 성장 둔화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음.
 - 미 기업 대표단과 함께 청정 기술 협력을 위해 중국을 방문중인 프리츠커는 이날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중국이 이전처럼 (고속)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국과 협력하려는 미국의 방침은 불변”이라고 강조함.
 - 베이징에서 중국 지도부와 만난 그는 “개혁 방침을 베이징 지도부로부터 청취했다”면서 “뉴 노멀이 장기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성장 기회를 중국에 제공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음.

- 중국, 시진핑 주석 방미 때 의회 연설 요청(4/15,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오는 9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미 때 시 주석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음.
 - 미중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지난 3월 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측이 이같이 요청했으며 미국 측은 “정부로서는 검토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답함.
 - 중국 측의 이러한 요청은 이달 26일 미국을 방문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는 것에 대항하는 동시에 시 주석 자신이 대미 협조 방침을 직접 밝힘으로써 미 의회 내의 중국 위협론을 완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임.

- 미 해군, 중국 잠수함 탐지용 ‘무인선’ 개발(4/17, 연합뉴스)
 - 미 해군이 향후 있을지 모를 중국의 잠수함 공격에 대비해 잠수함 추적 선박인 ‘무인선(drone ship)’을 개발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보도함.
 - CNN은 조지프 멀로이 미 해군 참모차장이 지난 2월 하원 군사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해 ‘ACTUV(Anti-Submarine Warfare Continuous Trail Vessel)’라는 이 무인선의 개발 상황을 보고했다고 전하였음.
 - 미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개발을 주도한 이 무인선은

길이가 약 132피트(약 40m)로, 수천 마일 거리 밖에서도 적의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 무인선 원형은 이미 생산에 들어간 상태이며 시험 운항에 성공할 경우 2018년까지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바. 미·일 관계

-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섬 방어’ 명기…센카쿠 염두(4/14, 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은 이달 말 합의가 예상되는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일본의 도서(섬) 방위를 위한 협력을 명기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함.
 - 양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발생시 미일 협력의 일환으로 도서 방위 관련 내용을 명기한다는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함. 이는 중국 정부 및 민간 선박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와 그 주변 해역에 계속 진입하는 상황에서, 센카쿠 유사시에 대비한 대(對) 중국 억지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됨.
 - 1978년 제정돼 1997년 한차례 개정을 거친 미일 가이드라인은 평시, 주변사태, 일본 유사시 등 3가지 상황에 대한 미·일의 역할 분담 내용을 담고 있음. 가이드라인에 도서 방위 문구가 들어가면 센카쿠 유사시 미군의 개입이 보다 명확해진다는 점을 의식한 일본 측이 문구 명기를 요구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다.
- 일본, 중국 제치고 미국 재무부 채권 최다 보유(4/16, 연합뉴스)
 - 일본이 중국을 제치고 미국 재무부 채권 최다 보유국이 됐다고 미국 재무부가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월 말 현재 1조2천244억 달러(약 1천340조 원)어치의 미국 재무부 채권을 보유해 중국(1조2천237억 달러)보다 7억 달러 어치를 더 가진 것으로 나타남. 1월 말 기준으로는 중국(1조2천391억 달러)이 일본보다 5억 달러어치를 더 보유했음.
 - 일본이 미국 재무부 채권 최다 보유국이 된 것은 2008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양국의 경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중국은 경기가 부진해지는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 채권에 대한 투자가 줄어드는 반면, 일본의 투자자들은 선진국 채권 중 가장 매력적인 미국 재무부 채권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임.

- 아베 총리·오키나와 지사, ‘미군기지 이전’ 회담 평행선(4/17,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沖縄)현 지사가 총리 관저에서 만나 오키나와 후텐마(普天間) 미군 비행장 이전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음.
 - 아베 총리는 이날 회담 모두에서 오키나와 본섬 남쪽 기노완(宜野灣)시에 있는 후텐마 미군 비행장을 섬 북쪽의 헤노코(邊野古) 연안으로 이전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 미국과 일본 정부 합의대로 헤노코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 이에 대해 오나가 지사는 과거 오키나와가 헤노코 이전을 받아들였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오키나와 지사 선거, 중의원 선거 등을 통해 헤노코 이전 반대의 압도적인 민의가 드러났다”고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특히 “스스로 (오키나와) 토지를 빼앗으면서, (기지가) 노후화됐다는 이유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오키나와가 (미군기지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처럼 불합리한 건 없다”고 맞섰다고 전해짐.

사. 미·러 관계

- 미국, 러시아 전투기의 미군 정찰기 위협비행 항의(4/13, 연합뉴스)
 - 미국이 러시아 전투기가 지난주 자국 정찰기를 상대로 위협비행을 한데 대해 공식 항의하기로 함.
 -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주 미 공군 RC-135 정찰기가 폴란드 북쪽 상공을 비행할 때 러시아 공군 SU-27 전투기가 후방에서 갑자기 고속으로 접근함. 이에 대한 미 국방부의 마크 라이트 대변인은 지난 7일 폴란드 북쪽 국제 공역인 발트해 상공에서 있었던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전문가답지 못한 위협비행은 현장의 승무원들을 다치게 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조종사 한명의 부주의한 행동이 국가 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항공 활동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현지의 안보 환경이 달라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함.

- 러시아, 對 이란 미사일 수출 계획두고 미국과 갈등 증폭(4/15, 연합뉴스)
 - 러시아가 자국 방공 미사일의 이란 수출 금지령을 해제하자 미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 러시아의 이번 결정은 대(對)이란 제재를 일정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6월 말까지 최종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는 이란 핵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러시아는 올해 안에라도 이란에 미사일을 수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밝혀짐.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전화해 러시아가 이란에 대한 S-300 방공미사일 수출 규제를 해제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뉴욕타임스와 AFP통신 등이 보도했음.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러시아의 이 같은 행보는 이란 핵협상의 최종 결과에 따라 대 이란 제재를 해제한다는 (주요국들의) 계획을 위협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 미 태평양사령관, 중·러 군사행보 ‘냉전수준’(4/16, 연합뉴스)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 중인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러시아 군 활동 등 양국의 군사행보가 냉전 수준으로 회귀했다는 미군 고위 관계자의 증언이 나옴.
 - 새뮤얼 라클리어 태평양사령관은 15일(한국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러시아가 지난 몇 달 동안 아태지역에서 냉전 수준에 가깝게 군사행동을 늘리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음. 최근 러시아는 탄도 미사일 개량을 통해 태평양 지역에서의 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극 및 아시아 지역의 잠수함 부대도 확충하고 있으며, 동북아와 동남아 지역 모두 러시아 군의 출몰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라클리어 사령관은 전하였음.
 - 한편, 최근 남중국해 분쟁지역에서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 8곳이 군사 전초 기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음.

- 푸틴 대통령, “미국, 옛 소련처럼 행동” 거친 비난(4/17, 연합뉴스)
 - 푸틴 대통령은 TV 방송으로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소련)는 동유럽 전체에 우리식 발전모델을 전파하려 했으나 안 좋게 끝났다. 우리는 이를 인정한다”고 운을 떼고서 “그런데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음.
 - 아울러 그는 “러시아는 제국(소련)을 부활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야망도 없는데 미국은 동맹 대신 가신만을 원한다”고 꼬집으며, “러시아가 누구도 적으로 보지 않는 만큼 남들도 러시아를 적으로 보지 않기를 바란다”며 최근 미국 및 유럽의 대 러시아 정책에 대해 불쾌감을 표출함.
 - 푸틴은 또 미국의 반발에도 이란에 대한 군사무기 수출 강행의 뜻을 밝히며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은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였음. 그는 “S-300은 방어용 무기로 절대 이스라엘에 위협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예멘 사태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아. 중·일 관계

- 중국, 부총재직 제안하며 일본에 AIIB 참여 타진(4/14, 연합뉴스)
 - 중국이 자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일본을 참여시키기 위해 물밑에서 ‘일본인 부총재’ 카드를 제안했다고 니혼게이지사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음.
 - 닛케이에 의하면, AIIB의 초대 총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진리첸(金立群) AIIB 임시 사무국장은 지난달 22일 베이징에서 일본인인 나카오 다케히코(中尾武彦)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에게 “역시 일본이 AIIB에 참가하면 좋겠다”고 밝히고, “필요하다면 내가 일본으로 가겠다”며 적극성을 보였다고 전해짐. 또한, 중국은 일본에 ‘창설 멤버로 참여할 경우 수석 부총재 자리와 이사 자리를 주겠다’고 비밀리에 제안했다고 전함.
 - 중국이 일본의 동참을 적극 희망한 것은 우선 다른 아시아 국가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데 일본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또 국제 금융에 밝은 일본 인사들의 도움을 받으려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됨.

- 리커창 총리, 지도자는 선조들 죄 짊어져야(4/14, 연합뉴스)
 -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는 1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 등 일본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도자는 선조들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리 총리는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고노 전 장관이 이끄는 일본 국제무역촉진협회 방중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것이 가능하면 중일관계는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함. 이는 아베 총리가 8월께 발표할 전후 70주년 담화(아베 담화)에서 침략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압박한 메시지로 풀이됨.
 - 리 총리는 고노 전 장관이 관방장관 시절(1993년)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한 고노담화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역사 문제에 대한 용기와 책임감을 나타냈다”고 높이 평가했음. 또한 “쌍방이 함께 (양국관계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할 의욕을 갖고 있다”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일정한 의지를 보였다고 전하였음.

- 중국, 미군문서 공개 “일본군, 포로미군 산 채로 화장”(4/16, 연합뉴스)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포로로 잡은 미군들을 산 채로 화장했다는 내용의 미군 문서가 중국 관영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음.
 - 신화망(新華網)은 16일 쓰촨(四川)성의 민간박물관인 쟈촨(建川)박물관이 소장한 항일전쟁 시기 미군이 작성한 기밀문서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함. 문서에 따르면 1944년 12월 16일 일본군이 후베이(湖北)성 잉청(應城)에서 도쿄 공습 임무를 마친 미군 조종사 3명을 붙잡아 심하게 매질하고, 피투성이가 된 채 속옷 바람으로 한커우(漢口)시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4마일 이상 행진을 해야 했고 다음날 화장장으로 끌려갔다고 함. 그곳에서도 약 30분간 학대를 당한 이들은 불에 태워졌는데 이 중 1명은 당시 살아있던 상태에서 불에 탔다고 전함.
 - 중국 관영언론이 일본군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미군 기밀문서를 구체적으로 부각시킨 것은 침략의 과거사를 부정·미화하는 일본 측을 향해 역사 공세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됨.

자. 중·러 관계

- 사드반대 중국에 러시아 첨단 방공미사일 배치 임박(4/16, 연합뉴스)
 - 차이나데일리가 러시아 언론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무기 수출업체 ‘로스오보론엑스포트’의 아나톨리 이사이킨 사장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산 첨단 방공미사일 시스템인 S-400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앞서 지난 14일 러시아 타스 통신은 이사이킨 사장이 “여러 나라가 구매를 원하지만, 중국이 처음으로 S-400 미사일을 공급받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계약규모 등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30억 달러(약 3조3천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 중국은 오래전부터 이 미사일의 구매를 희망해왔지만, 기술 유출을 우려한 러시아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짐. 중국군은 이 미사일이 배치되면 영공 방어뿐 아니라 중일 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열도 방어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중·러 해군, 올가을 동해서 연합 훈련(4/18, 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 해군은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과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일인 오는 9월3일 이전 동해에서 대대적인 연합 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홍콩 문회보(文匯報)와 봉황위성TV 등이 러시아 군사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음.
 - 지난 1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4차 국제안보회의에 참가한 이 전문가는 다음 달 9일 러시아의 2차대전 전승기념일에 중국 해군 편대가 처음으로 러시아 해군 흑해함대와 흑해 해역에서 연합 훈련을 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음.
 - 중국의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은 문회보에 “이번 훈련은 중국과 러시아 해군의 정례적 훈련”이라며 “양국은 훈련을 통해 한편으로 군의 실무 협력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 문제에서 같은 입장을 갖고 일본의 군국주의에 상당한 경계심을 표명하려 한다”고 주장하였음.

차.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 가뭄막이 동원에 주민들 고통(4/14, 자유아시아방송)
 - 올해는 노동당 창건 70돌을 경축하기 위한 수많은 건설동원에 가뭄극복을 위한 물막이 공사까지 제기돼 주민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 국경연선 지역에 사는 친척방문을 왔다고 밝힌 함경남도의 한 주민은 “지난해 함경남도는 가뭄으로 하여 농사에 큰 손실을 봤다”면서 “지난 겨울 내내 눈이 거의 오지 않아 올해는 최악의 가뭄이 닥쳤다”고 밝혔다.
 - 함흥시 임동리와 중흥리 일대는 성천강의 지류인 호련천이 말라붙어 당장 마실 물조차 구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강조했다.
 - 사정이 이렇다보니 성원, 용봉, 중흥리 일대 농촌가정들에서는 함흥 수리기계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수동식 펌프수도를 앞 다퉈 설치하고 있는데 당장 다가온 농사에 쓸 물이 없어 협동농장들마다 비상이 걸렸다고 그는 언급했다.
 - 이와 관련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물이 흐르는 곳엔 닥치는 대로 보막이를 하고 있다”며 “보막이를 위해 국토보존관리부 산하 기관들과 농촌건설대 노동자들,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모두 동원됐다”고 말했다.
 - 쫄장과 우물을 파 눈에는 물을 댈 수 있지만 높은 지대에 심는 발작물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물을 댈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때문에 주변 산골짜기에 계단식으로 보를 쌓아 흐르는 물을 잡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 이러한 보는 순수 인력으로 완공해야 하기 때문에 보막이에 동원된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고역을 치른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 캐나다 친척과 몰래 10분 통화한 北주민 결국…소식통 “北보위부, 태양열 배터리로 감청 전파탐지기 가동”(4/14, 데일리NK)
 - 북한 당국이 탈북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지역에 검열조를 파견한 가운데 국경연선 지역의 철통 경비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국경지역 경비인력이 증강되고 국가안전보위부 최신탐지설비들이 동원돼

경비가 강화되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음.

- 양강도 소식통은 “얼마 전 영농기와 갈수기를 맞아 국경지역경비를 ‘철통같이 강화’할 데 대한 중앙당 지시문이 하달됐다”면서 “국경부대들의 경비조직과 순찰근무강화, 보안기관의 유동인원 철저한 장악 통제 내용이 강조됐다”고 전했다.
- 이어 “이 같은 조치로 경비대는 강변접근 인원은 물론 밭일을 하는 주민들의 동태를 살피는 ‘망원감시초소’까지 군데군데 만들었다”면서 “야간에는 3인 1조로 구성된 수십 개의 강둑 순찰 조들이 15분이 멀다하게 꾸준히 교대로 경비를 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또 소식통은 “요즘 밭갈이 철이다 보니 주민유동이 많고 더욱이 갈수기 국경의 두만강 수심이 알아져 탈북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라면서 “보위부가 국경지역에 새로 증설한 신형전파탐지기와 전파장애(방해)설비가 쉴 새 없이 가동하고 있어 불법통화는 매우 어려워 졌다”고 설명했다.
- 소식통에 의하면, 농촌지역 주민들은 농번기가 되면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소토지(개인텃밭) 밭갈이에 바쁘기 때문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야산은 물론 강변으로 오가는 주민 통제 역시 어려움.
- 특히 갈수기로 강물은 현저히 줄어들어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탈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이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임.

■ “김정은, ‘대방으로 위장한 프락치 입국 차단’ 지시”…소식통 “北, 최근 중국 무역업자 출입 불허…통화·송금도 어려워”(4/14, 데일리NK)

- 북한 김정은이 북중 무역을 하는 대방들이 내부 정보 유출이나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고 있다고 판단, 이들의 입국을 불허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음.
-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3월 2일 에볼라가 해제되면서 중국 대방(무역업자)들이 조선(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희망에 부풀었으나, 북한 당국이 허가를 안 해주고 있다”면서 “국가 간 무역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무역업자들 간의 교류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됐다”고 전했다.
- 이어 소식통은 “김정은이 3월경 ‘조국에 도움이 안 되는 외국인들의 출입을 자제시킬 것’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면서 “순수하게 무역을 하는 대방들도 있지만 북한 당국이 판단하기에 공화국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판단해서 김정은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 그러면서 소식통은 “북한을 드나드는 무역 대방들 중에는 무역을 하면서도 북한 내부 동향이나 정보 등을 외부에 알려주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북한 당국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한 내부정보 유출이나 반대로 외부 정보 유입 등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북한 지난해 평균 식량배급, 유엔 권장량 63% 수준(4/16, 미국의소리)

- 북한 당국이 지난해 주민 한 명 당 하루 평균 383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유엔이 밝혔다.
- 유엔이 최근 발표한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양은 전년도의 하루 평균 배급량 385g과 비슷한 수준임.
- 하지만 세계식량계획 WFP의 1인 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63%에 불과한 수준이며,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도 크게 못 미치는 규모임.
- 특히 북한 당국의 지난해 8월과 9월 식량 배급량은 250g으로, 지난 3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 세계식량계획은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70%인 1천8백만 명 가량이 식량배급제에 의존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영양 부족이 여전히 큰 문제라고 밝혔다.
-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7월 북한 내 133 가구를 방문해 식량 실태를 조사했다며, 조사 가구의 81%가 인터뷰 시행 전 1주일 동안 질과 양 면에서 적절한 식사를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또 콩 생산 감소 등으로 북한 주민들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현재 북한 2세 미만 영유아의 85%와 산모의 절반 가량이 최소한의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고 있음.
-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주민의 영양 개선을 위해 올해 양강도와 함경남북도 등 9개 도 87개 군의 취약계층 180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미화 6천9백4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지난 8일 현재 모금은 목표액의 19.3%인 1천3백40만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세계식량계획은 밝혔다.

- 북, 때 아닌 장마당 가짜상품 단속(4/16,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당국이 갑작스럽게 담당 보안원(경찰)들과 관리원들을 동원해 장마당에서 가짜 상품 단속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여태껏 없던 가짜(위조) 상품단속에 장사꾼들은 그야말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이야기했음.
 - 15일 북한 장마당 사정에 정통한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요즘 장마당에서 가짜상품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지금은 식료품 위주로 단속하지만 공업(소비)품도 모두 단속하겠다고 선포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음.
 - 식료품은 주로 개인들이 집에서 만들어 공장제품으로 포장해 파는 술과 담배, 당과류인데 일부에선 두부나 계란, 젓갈류조차도 팔지 못하게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 이와 관련 소식통은 “그동안 장마당에서 가짜 약품들에 대한 단속은 많이 있었으나 먹는 식품을 단속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갑작스러운 단속에 장사꾼들 모두가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심정이라고 언급했음.
 - 소식통은 아직은 가짜상품들을 팔지 못하게 할 뿐 물건을 회수하지는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지 않으면서 “가짜는 식료품뿐만 아니라 공업품도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장마당 관리원들이 이미 장사꾼들에게 경고를 했다고 말했음.

- “北간부, 밤새 ‘징비록’ 보며 하루 피로 날려’…소식통 “정치적 색채가 없는 ‘왕가네 식구들’ 등 생활드라마 좋아해”(4/16, 데일리NK)
 - 북한 주민들의 남한 드라마 시청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해야 할 간부들 사이에서도 남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평안남도 소식통은 “요즘 중앙(평양)과 지방의 당 및 행정기관(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간부들도 한국 드라마를 매우 즐겨 본다”면서 “대다수 간부들은 퇴근 후 ‘머리숯’ 명목으로 밤늦도록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어 소식통은 “간부들은 여유로운 생활과 가택수색 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조용히 가족끼리 모여 시청한다”며 “시청드라마는 대체로 체제비방이나 정치적 색채가 없는 ‘징비록’, ‘정도전’ 등 역사드라마와 ‘왕가네 식구들’과 같은 생활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말했음.

- 109상무는 마을 인민반장들을 앞세워 수시로 불시 가택수색을 벌이곤 하지만 간부집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평양에는 중앙기관 간부 아파트가 있고 지방에도 도당아파트, 보안국 아파트 등 간부사택이 밀집되어 있음.
- 소식통은 “무역관계자들이 중국측 대방(무역업자)을 통해 여러 편의 드라마가 복제된 USB를 구입한 뒤 간부들에게 뇌물로 건네주는가 하면 보위, 보안원들은 압수한 영치품을 복사해 넘겨주기도 한다”면서 “간부들 사이에는 ‘또 밤을 꿏(밤을 새워)구만, 혼자만 즐기지 맙시다’는 농말이 자주 오간다”고 설명했다.

■ 북 간첩연루 화교들에 종신형(4/17,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은 지난 3월 27일 ‘조선중앙텔레비죤’을 통해 남한의 간첩 2명을 체포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 당시 북한당국은 체포된 두 명의 한국인이 북·중 국경지역에서 북한의 최고수뇌부를 모해하려는 테러활동을 벌렸다고 주장했다.
- 북한은 또 “테러분자들에게 포섭된 중국 국적자들에게도 국가테러행위 가담자들로써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해 이번 사건에 상당수의 중국화교들이 연관돼 있고 그들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임을 예고한 바 있음.
- 이런 가운데 복수의 북한 내부소식통들이 “당국이 평안북도와 평양시에 거주하고 있던 중국국적의 화교 수십 명을 구금했으며 그들 중 8명은 이미 형을 선고받고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되었다”고 전했다.
- 최근 국경연선 지역에 나온 평양시의 한 간부는 “체포된 화교들 중 일부가 보위부의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들었다”며 “그들은 중국대사관 성원들과 가족들 앞에서 최고 재판소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북한은 재판을 받은 화교들 8명과 연관 혐의를 받은 평양시 주민 5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으며, 형을 선고받은 화교들은 부인과 강제로 이혼 당했고 나머지 평양주민 5명은 가족들과 통째로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됐다고 함.
- 특히 소식통들은 이번 사건 이후 북한 보위부 반탐과에서 북한 내 화교들에 대한 집중감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음.

2. 북한 인권

- 프리덤하우스 ‘북한에 정치적 권리, 시민적 자유 전혀 없어’(4/14, 미국의소리)
 -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밝혔다.
 - 지난 1월 발표한 ‘2015 세계 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 중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지목했던 이 단체는 최근 추가한 북한 부문에서, 주민들이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각국의 상황을 정치적 권리 40점, 시민적 자유 60점 등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이 단체는 북한의 점수가 3점에 그쳤다고 밝혔다.
 - 북한은 특히 정치적 권리의 경우 선거 과정과 다당제, 정치참여, 정부의 기능 등 모든 분야에서 40점 만점에 0점을 기록했다.
 -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이 김 씨 일가가 독재를 하는 일당제 국가로 의회인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허수아비 기구에 불과하며, 정부가 사회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북한에는 또 부정부패와 뇌물이 만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의 시민적 자유 분야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완전히 봉쇄됐고, 법치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 이 단체는 다만 개인의 자치권과 권리 부문에서는 북한에 16점 만점에 3점을 부여했다.
 - 북한에 이동의 자유가 없고, 국내 재정착이 일상적으로 강제되며, 평양에 대한 접근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지만 장마당이 많은 주민들에게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임.

- “DMZ 횡단 여성들, 북 인권 제기해야”(4/14, 자유아시아방송)
 -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부국장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억압, 통제 등 주민의 무자비한 인권 탄압이라는 할아버지 김일성의 유산을 이어 나가기 위해 여전히 김일성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김정은 정권은 구타, 감금, 고문, 강제노역 등 온갖 인권 유린의 온상인 관리소, 교화소와 같은 강제수용소를 통한 공포정치를

자행한 김일성 체제의 반 인도적 범죄 행위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휴먼라이츠워치는 김일성 생일을 하루 앞둔 14일 ‘북한: 냉혹한 생일 유산-김일성의 인권 범죄를 기억한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음.
 - 이 단체는 보도 자료에서 “북한 정권이 일부 주민에 대한 독재적인 통제로 만족하지 않고 북한 주민의 삶을 모든 면에서 지배하고 공포에 떨게 한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지적을 소개하며 김일성의 생일을 축하하는 분위기에 맞서 북한 반 인도적 범죄를 종식시키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로버트슨 부국장은 김일성은 무자비한 주민 학대와 잔혹한 감시 체제를 구축했고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개인 숭배 체제 하에서 반대세력을 박해하거나 숙청했다고 비판했음.
 - 로버트슨 부국장은 여성운동가 30여 명이 오는 5월 북한에서 판문점을 넘어 남한까지 걸어가는 행사를 계획 중인 것과 관련해 이들도 북한 당국에 심각한 인권 탄압의 문제점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국의 글로리아 스타이넴, 영국의 평화운동가 메어리드 맥과이어 등 여성인권운동가들은 오는 5월 24일 ‘Women Cross DMZ’ 즉 ‘여성들 비무장지대를 건너다’라는 남북한 평화를 위한 행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리퍼트 “北, 인권보호 안하면 고립 더욱 심해질 것” 피습 이후 첫 공개강연 “주민복지보다 무기 개발에 열 올려”(4/15, 데일리NK)
- 마크 리퍼트 대사는 15일 “북한이 주민들에 대한 투자와 인권 보호,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를 하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음.
 - 피습사건 이후 첫 언론 공개 강연을 한 리퍼트 대사는 이날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북한 정권은 주민복지와 안녕보다 무기개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이어 리퍼트 대사는 “인권보호,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판과 고립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또 그는 “북한이 비핵화 없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북한은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회답에 나올 수 있음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음.

- 그러면서 그는 “비핵화가 북한과 관련해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우려는 아니다”라며 “분명한 것은 북한이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누구보다도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 북, 해외파견 노동자 행동지침 하달(4/16,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노동자들은 해외에 나가 근무할 경우 지켜야 할 행동지침이 있음.
- 특히 지난해 말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또 다른 특별 행동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 새로 내려진 행동지침은 이미 국가안전보위부를 통해 각국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음.
- 이 같은 사실은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운 대표가 16일 밝힌 내용으로, 행동지침의 입수 경로에 대해 북한 내부를 통해 알려진 사항을 녹취했다고 설명했다.
- 북한 당국은 우선 일하는 작업현장이나 일하는 모습을 외부 사람들이 촬영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렸음.
- 행동지침에는 구체적인 행동요령까지 나와 있는데, “특히 외국 기자 또는 인권운동가가 사진을 찍거나 촬영할 경우 사진기나 촬영기, 손전화기를 빼앗아 그 자리에서 박살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
- 또한 “구타 도중에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사죄하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말을 녹음하거나 가지고 있는 손전화로 촬영해야 하며 그것을 해당 단위에 바쳐야 한다”고 나와 있음.
-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비인간적 대우 속에서도 돈을 벌어야 함.
- 인권 유린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 외부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철저히 감춰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 자유경제원, “북한인권, 여성 그리고 북한인권법” 토론회 개최(4/16, 업코리아)

-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4월 14(화) 오전 10시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자유주의여성포럼’을 개최했음.
- 이번 포럼의 주제는 <북한인권, 여성 그리고 북한인권법>으로 김정은 체제가

저지르는 조직적인 반인도범죄에 대해 가장 취약한 계층인 ‘여성’을 중심으로 자유의 억압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와 제언이 오갔음.

- 발표를 맡은 인지연 대표(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미국변호사(Washington D.C))는 ‘북한인권’ 이슈가 이제는 일부 운동가들의 목소리가 아닌, 국제사회 전체의 의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년 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음.
 - 인 대표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는 김정은 체제의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지난 2014년 2월 공개된 유엔 북한인권 COI보고서에 낱낱이 명시되어 있음을 밝혔고, 김정은의 이런 반인도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회부할 것을 권고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것 역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 인 대표는 COI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북한인권침해의 6가지 범주 중에서도 ‘차별’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 인권침해의 대상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는 단순 가정에 국한된 폭력뿐만 아니라 남성이 대부분인 국가 공무원들, 시장의 치안을 관할하는 요원, 기차 감시요원, 군인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에 대해 성폭력을 저지르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미 하원 외교위원장 "김정은 정권,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정권"(4/17, 연합뉴스)
-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16일 북한 김정은 정권을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정권'이라고 규탄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자행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 의회 레이번 빌딩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음.
 - 로이스 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과거 반 총장과 만났을 때 내가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촉구했고 그 이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구성돼 곧바로 북한의 끔찍한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날 수 있었다"면서 "오늘 만남에서도 내가 반 총장에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외부에 노출시키고 문제 삼아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 로이스 위원장은 이밖에 반 총장과 미국 주도의 이란 핵 협상, 유엔 개혁 문제, 시리아 사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3. 탈북자

■ 탈북자 4명 중국 탈출해 동남아 도착(4/16, 자유아시아방송)

- 4월 들어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탈북자 구출활동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음.
- 중국 내 탈북자 구출활동을 벌이고 있는 남한의 민간단체 관계자는 “최근 4명의 탈북자들이 태국 유엔난민 수용소에 안전하게 진입했다”고 밝혔다.
-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구출된 탈북자들은 한 살짜리 어린이를 안은 30대 여성 한 명과 나머지는 20대 여성들로 알려졌다.
- 이들은 중국 길림성과 흑룡강성 등에 숨어살다가 지난 3월말에 브로커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행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 그는 “중국 장춘에서 운남성 곤명까지 가는 동안 고속도로에는 신분증을 검열하는 공안국 검열 초소가 무려 4개가 있다”면서 “이 초소를 피해 가다보니 큰 보름 이상 걸렸다”고 말했다.
- 그에 따르면 중국 공안의 단속은 10년 전에 비해 상당히 강화되었다면서 “신분증이 없으면 열차는 물론 버스도 승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중국 시진핑 체제 들어 사회치안 질서 확립과 부패척결 바람이 불면서 탈북자들의 한국행은 한결 더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됨.
- 또 북한에서는 국경경비가 강화된 결과 탈북 비용이 크게 오르고, 김일성 생일을 계기로 선포된 특별경비주간 때문에 국경을 넘는 북한 주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특이사항 없음미국서 탈북자 구출 기금 모금 음악회(4/17, 자유아시아방송)

- 오는 4월 26일 미국 매릴랜드 주 베데스다에 위치한 랜던 학교(Landon School)에서 북한 인권을 알리는 음악회가 열릴 예정이다.
- 이번 음악회에서는 탈북자 출신 피아노연주자 김철웅 씨, 그리고 북한에서 선전 대원으로 음악 활동을 한 탈북자인 한송화 씨, 색스폰 연주자인 데이비드 타올러

- 씨가 연주할 예정임.
- 이번 음악회에서 모인 기금으로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구출하는 데 쓰일 예정임.
 - 재미탈북민연대의 부대표 조진혜 씨는 이미 이번 모금을 통해 구출될 탈북자 4-5명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으며, 탈북자들을 한명 정도 구출하는 데는 미화로 3천에서 4천달러 정도 필요하다고 조 씨는 밝혔다.
 - 이 밖에도, 올해 북한자유주간 행사로는 탈북자들이 미국 의원을 대상으로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기회 뿐만 아니라 북한 실상을 알리는 사진 전시회 등도 열릴 예정임.

4. 이산가족

- 특이사항 없음

5. 납북자

- 특이사항 없음

6. 국군포로

- 물망초, 국제단체에 국군포로 송환 문제 호소…유엔, 국제엠네스티,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 단체에 진정서 보내(4/14, 코나스)
 - 북한인권단체인 물망초는 국군포로의 송환 문제와 관련해 유엔, 국제엠네스티,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단체에 진정서를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 진정서에서 이 단체는 “북한에서는 1953년 국군포로상호간 교환이후 ‘국군포로는 더 이상 없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나, 1994년 조창호 중위가 탈북해 대한민국으로 온 후 81명의 국군포로가 스스로 사지를 넘어 대한민국으로 탈북해 왔으며, 이 분들 중 한 분은 수많은 국군포로들이 자신과 함께 북한탄광에서 노역한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다”며 “6.25전쟁 때 포로가

- 된 국군포로들의 생사여부라도 알게 해 달라”고 촉구했음.
- 또한, 이 단체는 “탈북당시 함남 검덕광산에 약 600명, 인접 용양광산에 약 400여명의 국군포로가 고역을 당하고 있다고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69명의 국군포로명단을 제공했다”며 “생환한 국군포로가 본인과 같이 일했던 동료들의 명단을 작성해 제공했으므로 정부가 북한 당국과 접촉해 신속히 이를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아울러, “아직도 약 350여명이 살아계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제는 나이가 80대 후반에 이르러 평균수명을 넘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며 국군포로의 송환을 거듭 촉구했음.

7. 대북지원

- 캐나다, WFP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160만 달러 지원(4/15, 미국의소리)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는 14일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보고서’에서 캐나다 정부가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미화 160만 달러(1,601,281)를 기부했다고 밝혔음.
 - 캐나다 외교부 산하 국제개발부의 다이애나 카다지 대변인은 14일 캐나다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가 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이 자금은 북한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카다지 대변인은 덧붙였다.
 - 캐나다 정부는 앞서 올해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 사업에도 미화 55만 달러를 기부했음.
 -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가 올해 대북 지원 사업에 기부한 금액은 14일 현재 총 215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줄어들었음.
 -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지원 사업에 각각 미화 90만 달러와 270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음.
 -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올해 대북 지원 예산으로 6천9백40만 달러(69,395,000)를 책정했음.
 -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유엔이 발표한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2012년 기준으로 북한 2세 미만 영유아의 85%와 산모의 절반 가량이 최소한의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음.

- 또 5세 미만 어린이의 27.9%가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며, 단백질이나 미량영양소 섭취 등 적절한 영양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음.
-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주민의 영양 개선을 위해 올해 양강도와 함경남북도 등 9개 도 87개 군의 취약계층 180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인도, 북한에 밀 등 곡물 지원 계획”(4/16, 자유아시아방송)

- 16일 인도 일간 칼커타 텔레그래프는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인도가 북한에 밀 또는 다른 곡물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 신문은 인도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계획이 지난 13일 뉴델리를 방문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 리 외무상은 당시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인도가 2011년 1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준데 사의를 표한 뒤 추가 지원을 요청했음.
- 이에 대해 수슈마 스와라지 인도 외무장관은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변하였음.
- 인도 정부는 대북 지원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보임.
- 인도 정부는 또 리 외무상이 요청한 스와라지 외무장관의 북한 공식 방문에 대해서는 ‘당분간 방북 계획이 없다’고 밝혀 평양 답방이 조만간 실현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 북한 관영매체는 16일 리 외무상의 귀국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이 인도 외무장관의 북한 공식 방문을 요청했고 인도 정부가 이를 수락했다고 전했다.
- 한편 인도 외교부 고위 관리는 리 외무상의 이번 뉴델리 방문이 그 자체로는 그리 큰 외교적 성과를 냈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음.
-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대를 강화하는 데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외교행사라는 것임.

- 영국 NGO, 북한서 42만 달러 규모 재난 대비 사업(4/17, 미국의소리)
 - 영국에 본부를 둔 세이브 더 칠드런이 북한에서 40만 유로, 미화 42만 달러 규모의 재난 감소와 비상 대비 사업을 벌이고 있음.
 - 이 단체의 한 관계자는 독일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지난해 8월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 이 사업은 함경남도 신포군과 함흥시에서 재난 대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오는 7월까지 진행될 예정임.
 - 세이브 더 칠드런의 관계자는 독일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아 올해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 단체는 지난 1996년부터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과 위생 증진 사업을 벌이고 있음.
 - 특히 지난 2007년과 2010년 등 수해 때마다 함경남도 지역 수재민들에게 식수와 의약품, 비누와 양동이를 포함한 위생용품 등을 지원해왔음.
 - 2007년의 경우 함경남도 지역 수재민 8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와 의약품을 제공한 바 있음.

- 유엔 지원 의료기구, 북 장마당서 암거래(4/18,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이 북한에 지원한 의료기구와 약품들이 북한의 암시장에서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의 언론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북한 내부의 취재협력자가 지난해 10월, 북한 북부 지역의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의료기구와 약품 가격을 조사해보니 주사약과 여성 생리용품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기구가 유엔으로부터 지원받은 의료기기인 것으로 확인됐음.
 - 의료기구 가격에 따르면 유엔 물품인 '청진기'와 '혈압계'는 북한 돈으로 각각 3만5천 원, '체온계'와 '주사기 케이스'는 1만 3천 원, '겸자'는 1만 3천500원, '핀셋'이 8천 원 등에 팔렸으며 북한산 '페니실린'은 650원, 레마놀은 1천500원, 위생대 10개짜리가 1천800원 등의 가격을 나타냈음.
 - 특히 장마당에서 암거래되는 의료 기구는 북한 내 불법 의료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며 병원이 아닌 개인집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장마당에서 유엔 물품, 또는 국산 의료기기를 구매해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고 함.
 - 이처럼 북한에 지원된 유엔의 의료기구와 의약품 등이 암시장으로 흘러들어

가면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북한 주민에게 팔리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불법 의료행위를 부추기는 데는 사실상 형식만 남은 ‘무상치료제’ 정책이 배경이 되고 있음.

- 독일 NGO, 북한 청각 장애인에 ‘특수시계’ 제조 기술 전수(4/18, 미국의소리)
 - 독일에 본부를 둔 대북 민간 구호단체 ‘투게더-함흥’이 북한 청각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사업에 나섰다.
 - 세계농아인연맹 (WFD)의 북한 연락관인 투게더-함흥의 로버트 그룬드 대표는 북한 청각장애인들이 장애인용 알람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각장애인용 알람시계는 정해진 시각에 소리 대신 반짝이는 움직임으로 시간을 알려줌.
 - 청각장애인인 그룬드 대표는 일반인들을 위한 생활용품이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쓸모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알람시계가 그 가운데 하나라면서, 청각장애인을 위해 특수 제작된 알람시계가 필요하지만 북한에서는 구할 수도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시계가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말했다.
 - 투게더-함흥은 독일의 전자업체인 APE (Angewandte Physik Und Elektronik GmbH) 사와 손잡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APE사는 북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특수 알람시계 100 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부품과 장치를 기부했다고 그룬드 대표는 밝혔다.
 - 그룬드 대표는 또 APE사의 직원이 오는 5월 1차로 열흘 간 북한을 방문해 현지 청각장애인들에게 특수 알람시계 제조 기술을 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룬드 대표는 이번 계획이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일반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북한 내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확대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청각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해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8. 북한동향

- 특이사항 없음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